

# 국힘 새 당대표에 '윤심' 업은 김기현 선출

52.93%... 안 23.37·천 14.98%  
김재원·김병민·조수진·태영호  
새 최고위원...尹 친정체제 구축

국민의힘 새 당대표에 '윤심'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등에 업은 김기현 후보가 8일 선출됐다.

최고위원 등 신임 당 지도부가 친윤계 후보들로 모두 채워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친정 체제가 구축됐다는 평가다.

김기현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서 과반인 52.93%를 득표해 결선까지 가지 않고 당 대표로 당선됐다.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후보는 각각 23.37%, 14.98%, 8.72%를 득표했다.

김 대표는 앞으로 집권 여당의 총괄 책임자로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됐다.

김 대표는 이날 수락 연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다. 하나로 똘똘 뭉쳐서 내년 총선 압승을 이루자"며 "연포탕(연대·포용·탕평)의 대통합 국민의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고 내년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둬 국민의힘의 성공시대를 반드시 써내겠다"며 "그 일을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된 김기현 의원이 8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3차 전당대회에서 당기를 흔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겠다"고 강조했다.

신임 최고위원에는 김재원·김병민·조수진·태영호 후보가 각각 17.55%, 16.10%, 13.18%, 13.11%의 득표율을 기록, 새로운 지도부에 이름을 올렸다. 장예찬 후보

는 청년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이준석계'로 당 대표에 나섰던 천하람 후보와 최고위원에 출마한 허은아·김용태 후보, 청년 최고위원에 나섰던 이기인 후보 등 전야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팀은 모두 고배의 잔을 마시게 됐다.

선거 과정에서 친윤계와 대립각을 세웠던 안철수 후보 역시 당내에서 비주류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어 향후 어떤 정치적 활로를 모색할지 주목된다.

정치권에선 윤석열 정부 개혁 과제 완

수를 총선 승리 해법으로 내걸고 선출된 김기현 대표 등 새 지도부가 '당정대 일체'와 '책임 정치'를 보다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로 꼽히는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가치연대 외교 등 윤석열 정부 핵심 정책들과 정부 국정과제 추진에 당력을 집중해 적극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다음주 윤석열 정부 핵심 정책인 노동개혁 관련 당정협의를 열기로 했다.

내년 총선 승리라는 핵심 과제를 안게 된 김 대표가 당장 안아야 할 과제는 주요 당직자 임명이다. 당 대표의 당직 인선은 주요 정치적 메시지가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내년 총선 공전 과정에서 나오는 잡음을 최소화하고, 현 여소야대 국면을 해소하는 것도 김 대표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그러나 당 일각에선 당이 대통령실에 끌려 다닐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당의 주체성과 자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안철수·황교안 등 경쟁 후보들이 울산 KTX 역세권 땅 시세 차익 의혹, 대통령실 행정관의 전당대회 개입 의혹 등을 제기한 만큼, 적잖은 경선 후유증도 예상된다. 서울=김선욱 기자

## 여야, 16일 기재위 조세소위... 조특법 정부안 처리 논의

### 세액 공제 혜택 확대 합의 불발 민주 "가능하면 3월 처리" 입장

여야가 오는 16일 기획재정부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일명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정부안 처리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반도체 업계는 조속한 입법화로 침체에 빠진 반도체 분야에 활력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8일 "민주당과 16일 조특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전체회의는 오는 22일 개최해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 의원은 "2월 처리해야 할 시급하고

중요한 법안이었는데 합의가 안돼 3월에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라며 "정부도 이미 입법안을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도 "일정에 합의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세부 내용은 검토해야 하지만 가능하면 3월 처리를 하자는 게 기본 방향"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업계 불황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최근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추진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 위기론이 대두되며 여야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신 의원은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때문

에 우리가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지 않느냐"며 "여러 자료를 받아보고 전문가, 관련 업계에서도 진짜로 원하는 건지 아닌지 간담회도 열려 한다"고 전했다.

정부안은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기본 공제율을 대기업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전 3년 동안 연평균 투자 금액을 초과해 투자하는 경우 올해까지는 10% 추가 공제를 해주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추가공제 적용 시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야당은 그간 중견·중소기업 투자공제를

상향에는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대기업 세제 혜택에는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미국, 일본, 대만 등의 글로벌 상황이 심상치 않자 조속한 처리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세액공제폭을 정부안보다 높이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단 이는 일부의 주장이며 민주당 주류 의견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반도체 업계는 '이번에는 될 것'이라는 낙관론과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교차하는 분위기다.

앞서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글로벌 경기둔화, 금리인상 등 경제여건 악화로 민간의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업계의 중장기적 투자계획 수립을 위해 신속한 입법 추진을 국회에 건의한 바 있

다.

반도체산업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제율 상향 비율은 중소기업의 투자와 고용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표적인 장치 산업인 반도체 제조업은 세계 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글로벌 대기업의 생산시설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의 매출이 크게 늘고, 국내 소부장 기업의 기술·제품 개발, 설비투자 확대 등 연쇄적 생태계 강화 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치열해지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정치권 지원 없이 국내 반도체 업계가 경쟁력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다"며 "본회의 처리까지 여야의 조당적 논의와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 제20회 호남마라톤

**대회일시** 2023년 4월16일(일) 오전7시~

**대회장소** 승촌보 영산강문화관 뒤 광장

**대회코스** 승촌보 영산강문화관 ~ 나주 영산교

**종 목** 남·여 개인전 10km, 하프

**참 가 비** 30,000원

**참가신청** 호남마라톤 홈페이지 (www.호남마라톤.kr/)

**이메일** 419marathon@hanmail.net

**접수마감** 2023년 3월 31일(금) (선착순 500명)

**참가문의** 061) 375-1201

**주최** 全南日報

**주관** 전일엔컬스 마라톤세상

**후원**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